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1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국세청, 개청 50주년 '준법·청렴' 원년 자임
-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청렴사회 기대와 경제위축 우려 공존
- 금융정보분석원, 내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
- 설 선물 예약판매 5만원 미만이 98%... "청탁금지법 영향"
- KRPIA "윤리 경영 통해 제약업계 신뢰 높이겠다"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CSR의 교과서를 쓰는 세아상역

3. 청렴 위반 사례

-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4.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Part5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국세청, 개청 50주년 ‘준법·청렴’ 원년 자임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준법·청렴세정’을 핵심 가치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서비스기관, 탈세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징수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에 역점을 뒀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 구축과 FIU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했으며,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 기반을 강화해 고의·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적발 및 추징했으며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가동, 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했다. 또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수색을 강화하였다.

또한,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해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업무단계별 전산관리 강화 등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업무검토·결재 과정에서 관리자 역할을 확대했다.

2016년 한 해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의 실천을 위해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을 유도하였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5807

2.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청렴사회 기대와 경제위축 우려 공존

청탁금지법이 1월 5일로 시행 100일을 맞으며, 대체로 청렴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화훼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이 있는 등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더치페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접대가 자제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17건(1월 3일 기준)에 달한다. 이중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발주한 공사에서 시공사 임원이 공사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권익위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테스트포스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의 혼선을 막기 위해 권익위 부위원장·법무부 법무실장·법제처 차장 등 차관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TF를 구성하고도 일부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부분에서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외에도 자주 묻거나 반복되는 유권해석 문의항목을 정리해 일주일에 한 번씩 '청탁금지법 FAQ'를 배포한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04_0014620286&cID=10305&pID=10300

최근 동향 및 소식

3. 금융정보분석원, 내년 금융사 자 금세탁방지 검사 강화

금융당국이 테러자금 조달방지,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새 금융상품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의를 열어 내부통제체계 구축 미비, 고객확인제도 이행 부족,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 등을 지적했다.

<'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

분야	중점 점검 사항
내부통제	AML 관련 독립적 감사 수행의 충실성
	직무에 따른 차별화된 AML 교육실시
	신상품 위험평가 및 관리의 적정성
	해외 영업점 AML 체계 운영의 적정성
고객확인제도	Watchlist Filtering DB 완결성·이행여부
	본인대상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행여부
	AML위험평가모델 구축·관리의 적정성
의심거래보고 제도	STR 추출 기준에 대한 지속적 관리 여부
	STR 보고 품질 및 신속성 제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보고기간 준수 및 충실도 제고

또한, 위험기반접근법 검사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위험평가체계 강화, FIU-검사수탁기관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 'RBA 위험평가시스템', '업권별·금융회사 별 RBA시스템' 간 연계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에 검사수탁기관이 실시간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http://news1.kr/articles/?2861040>

4. 설 선물 예약판매 5만원 미만이 98%... "청탁금지법 영향"

유통업계가 설(1월 28일)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체 판매 수량의 98%가 5만 원 미만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8~18일 실시한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실적 집계 결과, 5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판매 수량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9/0200000000AKR20161219153300030.HTML?input=1195m>

5. KRPIA "윤리 경영 통해 제약업계 신뢰 높이겠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윤리 경영을 통한 제약업계 신뢰를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옥연 회장은 "2016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관행에 대한 변화와 사회적 공감기가 있었다"며 "윤리경영을 통한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으로 제약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새해에는 보건의료정책도 그 어느 때 보다 큰 변화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정책과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의 변화가 환자중심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343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윤리경영 실천 사례

CSR의 교과서를 쓰는 세아상역

1. 아이티와 세아상역

2010년 1월 아이티에 7.0규모의 강진이 일어난 후 많은 원조국과 NGO가 모여 아이티 재건을 위하여 맘을 흘렸지만, 워낙 피해가 컸던 탓에 회복세는 생각보다 더뎠다. 이에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의 기부금으로 아이티를 재건시키기로 결정했다. 지진은 아이티 남부에만 집중적인 피해를 입혀, 미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아이티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국가의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북부에 위치한 카라콜이라는 마을에 산업단지 및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고용창출 효과를 줄 수 있는 저임금 산업으로 봉제업을 결정하고 미국에 봉제수출을 하는 나라 및 기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미정부는 아이티 정부가 제공한 부지에 미주개발은행이 공장을 짓고 미정부는 발전소,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및 근로자의 거주지를 건설하고, 섬유봉제업체가 신도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직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정부는 수많은 업체 중 상호제안이 일치하는 곳으로 세아상역을 선택하였고, 세아상역은 공장 12개를 건설하여 약 2만명의 아이티 주민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이티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무관세 혜택을 보장하였으며, HELP(the Haiti Economic Lift Program)라 불리는 제도로 아이티는 2020년까지 자체 생산한 봉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2. 세아학교

세아상역은 아이티 산업단지 인근에 세아학교를 세워 카라콜 지역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세아상역은 멕시코 생산법인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진출의 성공에는 현지 문화 적응력 및 현지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으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세아상역은 아이티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1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를 설립했다. 세아학교의 특이점은 세아학교가 공장 옆에 들어선 직원 대상의 교육시설이 아닌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라는 점이며, 아이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이티 출신의 교육자 ‘장 멀빌’ 씨를 채용하였고, 멀빌씨는 학교 운영 및 교사 채용 등에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다.



2016년 8월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세아상역은 종합학교로서의 성장계획을 발표했으며 2016년 7월부터 중학과정을 진행할 신규 건물을 준공했으며 9월부터 해당과정 교육을 시작했다. 중학 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위하여 고등 과정 전용 건물 신축 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700명 이상 규모의 아이티 최고 수준의 종합 학교로 성장할 계획이다.

3. 의료봉사활동

세아상역은 교육 외에 의료부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아는 과거 콜레라 관련 의료키트를 제작하던 때부터 주민들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깨달아 2012년에 의료봉사활동을 실시

윤리경영 실천 사례

했다. 2012년 의료봉사를 시작할 당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 단순한 결막염으로 시력을 잃고 지내다 치료로 인해 시력을 회복한 환자 및 심한 염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던 환자의 치료 등 완치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티 주민들에게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다.

그 후 세아상역은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아상역과 함께 2014년부터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병원은 양산부산대 병원으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조지워싱턴 간호대학도 세아상역과 뜻이 맞아 3년째 의료봉사를 함께 하고 있다.



세아상역의 김기명 대표이사는 ‘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업이며,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커뮤니티와의 친화는 필수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현지 사회와 친해지는 것은 비즈니스에도, 현지 상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4. 세아상역의 맞춤형 CSR 전략

세아상역은 아이티뿐만이 아닌 과태말라, 니카라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다른 생산기지에 서도 CSR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큰 자금만 단순히 투자하는 방식을 벗어난 지역별 맞춤 CSR로 현장

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

니카라과에서는 피를 뽑으면 영혼도 빠져나간다는 미신이 있어 국민들이 헌혈을 거부해서 세아상역은 헌혈을 CSR의 주된 테마로 잡고 헌혈을 많이 하고 있다. 고아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고아원을 돕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빈민촌에 도시락 나눔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아상역은 1986년에 설립되어 섬유 부문에서 1조 5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다. 세아의 창업자인 김웅기 회장은 회사의 목표는 단순히 1위 기업을 하는데 있지 않으며, 새로운 세계와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아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도전정신, 인재제일, 일터행복, 상생추구가 세아인이 되기 위한 핵심가치라 강조한다.

매출액 1조원대의 회사가 한 나라의 교육과 의료를 변화시키고 있다. 공단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다른 회사 및 단체들도 아이티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세아상역이 아이티 북부 지역 카라콜을 변화시킴으로써 아이티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단순한 일회성의 사회공헌활동을 넘어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는 지속적인 CSR은 세아상역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생추구를 실천해나가는 중이다.

신현암, 장재웅, 빈국 아이티 혁신의 방아쇠 당겨 CSR의 교과서를 쓰는 세아상역, Dong-A Business Review, 2016 Issue 2
<http://www.sae-a.com/kor/csr/engage/support>

청렴 위반 사례

1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 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시사점 :

- ① 특허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③ 사무관 C는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④ 사업자 A가 변리사 B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을 사무관 C가 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됨
- ⑤ 사업자 A는 제3자인 변리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⑥ 변리사 B는 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2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시사점 :

- ①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 ②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③ 교사 B와 공기업직원 C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지식마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Part5

스마트위슬 윤리경영 뉴스레터 12월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1월호에서는 ‘부정청탁 방지 업무의 총괄 및 징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 청탁금지법은 업무의 총괄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예방조치 등의 기준 작성을 수행함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위반행위의 신고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 등’인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과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제13조제1항이 있으며,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함
- 신고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신고자에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신고자는 조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며 조사기관은 재조사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함

3)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 보호 및 보상 대상 신고자
모든 신고주체는 보호 대상에 해당되며, 포상금 및 보상금은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됨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공개 및 보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됨
- 보상금 및 포상금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 위법한 직무처리 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직무수행 중 법 위반사실 발견 시 직무의 중지 및 취소 등 필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은 관계있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함
- 비밀누설 금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교육과 홍보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준수 서약서를 받을 의무가 있음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해야 함

지식마당

2. 징계 및 벌칙

1)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공직자등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는 제재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

2) 벌칙

-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 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수수금액의 2배~5배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과태료 부과 통보

-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

4) 과태료 부과 취소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과태료 부과 전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5) 양벌규정

-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 가능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함
-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분산된 운영과 의사결정, 복잡한 재무구조 및 회계 관행에 비추어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있으며,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다해야 면책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감지되고 있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Quiz

1. 다음 중 청탁금지법 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 ① 공직자
 - ② 비공직자
 - ③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 ④ 누구나

2. 다음 중 위법한 직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천만원 이상의 벌금

3.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 ②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공직자
 - ③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④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4. 다음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이 아닌 것은?
 - ① 직무에 따른 차별화된 AML교육 실시
 - ② AML 위험평가모델 구축 및 관리의 적정성
 - ③ STR 추출 기준에 대한 지속적 관리 여부
 - ④ FIU 보고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2. 답 ②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금품은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3. 답 ③ 기관이나 하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답 ③ 공직자 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 행사

1. 한전KDN, 청렴캠페인 시행

한전KDN은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광주·전남 청렴클러스터인 '빛가람 청렴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과 공동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한전KDN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청렴 키퍼런스' 전시회에 참여해 청렴정책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청렴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는 기관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한전KDN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15>

2. 포스코,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포스코는 지난 28일 포스코센터에서 2016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를 갖고 한 해의 활동실적과 2017년 실천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코는 2016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 준수활동을

펼친 국내사업관리실과 STS원료그룹 실천리더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1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2017년 계획, 공정거래 정책동향 및 주요이슈 등을 공유하며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다졌다.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892>

3. 롯데멤버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개최

롯데멤버스는 지난 16일 '2017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 향상, 규정 위반행위 리스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롯데멤버스는 연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과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및 내년 상반기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승하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건전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사회적 기업의 필수 요건'이라며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질적 성장으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9_0014590673&clID=10401&pID=10400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